목포시 시내버스 매입 추가 협상…인수금액 입장차

올 7월 준공영제 시행 앞두고 버스회사와 네 차례 협상 합의안 못내

이달 마무리 목표…8년만에 전면개편한 노선안 26일부터 시범운행

목포시가 오는 7월 준공영제 시행을 앞두고 노선권 매입을 위한 막판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노선권) 인수인계 협상안을 이달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달 열리는 목포시의회 임시회에서 다시 심사를 받을 예정이다.

21일 목포시에 따르면 시와 시내버스 운수업체(태원여객·유진운수)는 지난 13일부터 20일까지 네 차례에 걸쳐 노선권 매각을 위한 협상을 해왔다.

지난달 목포시는 노선권을 감정평가 평균 금액인 210억원에 매입하겠다는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했지만 부결됐다.

지난해 막대한 적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운송업체가 사업 포기를 선언하자 목포시는 노선권 확보를 추진해 운행 중단을 막고자 했다.

목포시는 시의회의 협조를 얻어 지방채 발행을 통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는 혈세 투입에 부정적인 시민 여론을 들어 시가 제출한 동의안을 부결하고, 재협상을 통한 새로운 안을 요구했다.

목포시는 이에 따라 감정평가사 3곳이 산정한 인수금액 가운데 최저가를 업체 측에 제안했다.

하지만 업체는 이에 대해서도 "쌓인 부채와 퇴직금을 지급하기에 턱없이 모자란다"며 난색을 보이고 있다.

운수업체가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143억원으로, 금융권 부채·이자액과 합하면 216억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운수사업자가 개인재산을 들여 마련한 가수금은 150억원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목포시는 지난해 이 업체에 재정지원금 156억원을 지급했지만, 적자를 메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간 목포시는 운송원가의 80% 수준을 지원해 왔지만, 지난해에는 비상 경영체제에 들어가며 운송원가 100%를 지원했다.

목포시는 22일 다섯 번째 협상을 벌여 운수업체와 노선권 인수를 위한 합의안을 만들 방침이다.

이후 오는 3월7~20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 계약 동의안'을 다시 올려 심사를 받을 계획이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인수인계가 난항을 겪고 있지만, 목포시는 이와 별개로 8년 만에 전면 개편한 시내버스 노선안을 오는 26일부터 시범 운행한다.

본격적인 개편안 운행은 다음 달 4일부터 시작한다.

시내버스 노선은 기존 14개에서 6개가 줄어든 8개 노선이 운행된다. 목포시는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교통카드 자료와 통신사 유동인구 등 교통 빅데이터를 분석해 노선 개편을 추진했다.

간선 1~3번, 순환 66번·77번·88번, 지선 10번·20번·20-1번이 운행한다. 운행 간격은 간선 10분 안팎, 순환버스는 각각 13~30분, 지선버스는 30분 안팎이다.

무안, 영암을 오가는 시계 외 버스는 운행 대수와 횟수를 감축한다.

신안(130번)은 그대로 유지한다.

적자가 예상됨에도 필요성이 있어 운행하는 '공공형 버스 낭만버스'는 출퇴근 시간대와 주간 시간대에 횟수를 늘려 운행한다. 낭만버스 11번·22번·33번 등은 대양산단과 고하도 해상케이블카 등을 오간다.

목포시는 노선 개편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버스업체, 용역사와 '노선 개편 공동 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추진단은 노선조정반, 민원대응반, 개편홍보반, 현장대응반으로 나뉜다.

10명으로 구성된 전화 상담을 운영하고, 주요 환승 거점 정류장인 목포역, 목포터미널, 목포우체국에 안내요원 6명을 배치한다.

시범 운행을 하는 26일부터는 목포시 직원이 2인 1조를 이뤄 하루 240명이 출퇴근 시간에 주요 정류장 60곳에서 안내를 한다.

전체 정류장 500여 곳에는 노선 안내문을 붙이고, 현수막, 시 누리집,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해 노선 개편을 홍보하고 있다.

각종 버스정보시스템(BIS)과 인터넷 포털 등에도 바뀐 교통 정보를 반영하고 있다.

김호현 목포시 대중교통과 주무관은 "운수사업자와 이달 들어 네 차례에 걸쳐 노선권 인수를 위한 협의를 벌이고 있지만 인수금액에 합의를 보기가 쉽지는 않다"며 "시민의 발인 버스를 멈출 수는 없기에 시의회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오해를 풀며 협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

신안군이 세계 최대 바다제비 번식지인 칠발도·구굴도 서식 환경을 개선한 결과 지난해 폐사 개체 수가 예년보다 95% 급감했다. 구굴도 인근 해상에서 관찰된 바닷새인 슴새 무리. 〈신안군 제공〉

신안군 세계 최대 바다제비 서식지 복원…13년 관리 결실

비금면 칠발도·흑산면 구굴도

교란종 쇠무릎 제거 후 폐사 줄어

신안군은 세계 최대 바다제비 번식지이자 천연기념물인 칠발도와 구굴도의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한 복원 사업이 결실을 봤다고 21일 밝혔다.

신안군의 넓은 해상에 분포한 작은 섬들은 봄, 가을철에 이동하는 철새들이 쉬어가는 중간 기착지(stopover site)이자 세계적인 주요 바닷새 번식지이다.

바닷새 집단번식지로서 학술 가치가 뛰어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비금면 칠발도와 흑산면 구굴도가 대표적이다.

두 섬은 4종의 바닷새(뿔쇠오리·바다쇠오리·바다제비·슴새)가 10만쌍 이상이 번식하는 국제적인 바닷새 집단번식지다.

그중 바다제비는 6월에 와서 10월까지 번식하는데 섬에서 자생하는 밀사초 뿌리 주변의 부드러운 흙을 파서 만든 굴이나 바위틈에서 서식한다.

전 세계 개체군의 80% 이상이 신안 구굴도(최대 10만쌍)와 칠발도(1만쌍) 두 섬에서 번식하기 때문에 종 보전을 위한 서식지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생태적인 가치 또한 높다.

그러나 섬에서 자생하지 않았던 쇠무릎이 유입돼 번식지 교란이 일어나 매년 많은 수의 바다제비 폐사가 확인됐다.

신안군은 문화재청, 국립공원공단, 해양항만청, 지역 대학교 등 관련기관과 번식지 복원 협의체를 구성해 2011년부터 쇠무릎을 제거하고 번식에 필요한 밀사초를 이식하는 서식지 개선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연간 최대 1000마리가량이 폐사했던 바다제비가 복원 사업 후 매년 점진적으로 피해 개체수가 줄었으며 지난해 조사 결과 95% 급감한 43마리만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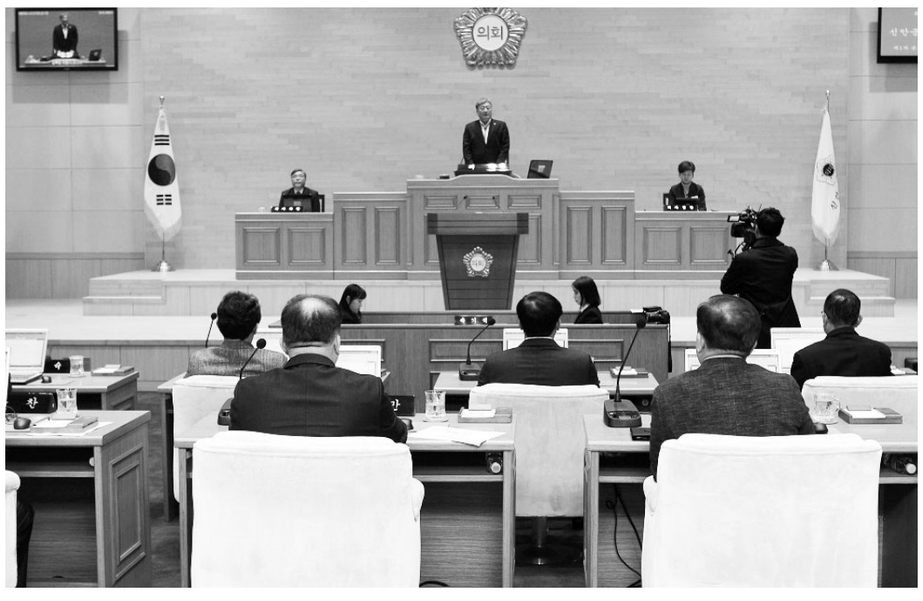
바다제비 서식지 개선 사업 이외에도 호주 연구팀(Australasian Seabird Group)과 국제 공동조사도 했다.

지난 2022년부터 바다제비의 먹이, 번식 개체군 변화, 월동지 추적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은 바다제비의 생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를 2026년까지 추진한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연구기관이 아닌 지자체에서 철새 서식지 개선을 위해 13년간 꾸준히 추진한 사례는 신안군이 전무하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신안군의회 317회 임시회 27일 조례안 심의·의결



신안군의회는 오는 27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신안군의회 제31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

신안군의회는 2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실과소의 주요 업무보고 청취 및 조례안 등을 심사하고 27일 신안군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에 대해 최종심의·의결하게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박용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안군 건강 도시 기본 조례안 ▲신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신안군 해안사구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을 포함해 총 20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영암군 내년도 국고·공모사업 발굴 보고회

영암군이 정부의 재정 운용 기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2025년도 국고 및 공모사업 발굴 보고회'를 최근 개최했다고 밝혔다.

보고회는 중앙정부와 전남도에 영암군의 사업을 건의하기 전, 사업의 필요성·타당성 논리를 보완하는 등 체계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된 자리다.

보고회에서는 1조3410억원 규모의 영암군 미래성장 동력, 주민 체감 생활 밀착형 국고 및 공모사업 등 총 48건이 다뤄졌다.

주요 사업으로는 ▲전남 이주민 스마트콤플스 조성 ▲월출산 생태 아트케이션 라운지 조성 ▲국립 씨름연수원 건립 ▲국립 바둑경기장 건립 ▲국립 영산강 생태원 유치 ▲국립 영산강하구관리센터 설립 ▲해상풍력 핵심부품 벤치 테스트 시험센터 구축 ▲국립 해양수산 방사능 방재센터 유치 ▲'하늘아래 첫 부처길' 탐방 인프라 구축 등이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하고 사업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현안 사업이 다수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완도군-건강관리협회 해양치유 활성화 협약

완도군은 지난 20일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해양치유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해양치유산업 활성화 등을 위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박종석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치유산업 홍보 및 한국건강관리협회 소속 직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해양치유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협조 체계 구축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완도 해양치유가 건강관리협회 직원들의 심신 치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지난해 11월 국내 최초로 해양치유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를 개관한 이후 단체 이용객 유치를 위해 기관, 단체, 기업 등을 방문해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신우철(왼쪽) 완도군수와 박종석 한국건강관리협회 광주전남지부 본부장.

딸라소풀과 명상풀, 해조류 거품 테라피실 등 16개의 테라피실을 갖춘 완도 해양치유센터는 개관한 지 두 달여 만에 1만5000여 명이 방문하는 등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광군 청년정책협의체 워크숍…화합 도모

영광군이 지난 20일 청년정책협의체 30여 명의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청년정책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규 위원에게 위촉장을 주고 협의체 역할을 알렸다.

이어 교육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청년 위원 간 교류 시간을 갖고 유대감을 만들었다.

영광군은 청년정책협의체 안에 일자리와 복지문화, 생활안정 등 4개 분과를 구성했다.

청년정책협의체는 분과별 활동을 통해 발굴한 청년정책을 제안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정책 모니터링 군정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위촉된 한 신규 위원은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직접 참여할 기회가 주어져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며 협의체 활동에 적극 참여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제안자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영광군 관계자는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위원들 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활동을 부탁한다"며 "군에서도 협의체에서 제안된 의견들이 군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창원 기자 kcw@kwangju.co.kr

진도·해남·완도 해역 항로표지 확충·정비

목포해수청, 사업비 47억원 확보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올해 진도-해남-완도해역의 항로표지 확충과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47억원을 확보했다고 21일 밝혔다.

항로표지란 선박이 안전하게 항해하는 데 필요한 선박의 위치나 해상 장애물의 위치, 해상기상정보 등을 알려주는 항행 보조시설로 등대, 등표, 부표 등이다.

목포해수청은 확보된 사업비로 완도군 보길면 정자리와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 전면 해상에 위치한 수중암초에 등표 2기를 설치한다.

또 장기 운영으로 노후화된 항로표지시설물에 대한 재도장 및 보수보강을 추진하고, 항로표지 기능 장애 시 즉시 복구할 수 있도록 예비품(태양전지, 등명기, 축전지, 충방전조절기 등)도 확보할 계획이다.

목포해수청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47억원 중 33억(70%)원을 상반기 조기 집행하고, 관람객들의 방문이 잦은 유인등대의 안전시설(안전난간, 소화장비, 진입로 등)을 정비해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쓸 방침이다.

목포해수청 관계자는 "항로표지시설의 항해 위험요소를 사전에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 안전한 해양교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